

이달의 초점

개인의 행태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출산 결정요인과 출산장려금의 영향

|하슬앞|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아동수당의 영향

|이아영|

근로장려세제의 노동 공급에 대한 영향

|박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아동수당의 영향¹⁾

The Effects of the Child Allowance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아동수당이 가구 소비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총지출의 확대보다 지출의 재배분이 두드러졌고, 특히 아동 의류와 오락·문화(서적·문구 포함) 등 아동 관련 직접 지출이 일관되게 증가했다. 효과는 가구 특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에서는 교육비와 식료품비가 증가하여 생계 보완과 아동 투자 기능이 병행되었고, 중고소득 및 1자녀 가구에서는 적립예치식 저축 증가가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수당이 가계에서 '자녀 전용 자원'으로 용도 지정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소득 흐름이 제공될 때, 수당은 단순한 현금 이전을 넘어 아동 발달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향후 아동수당 정책은 연령 확대 등 보편성을 강화하되 가구 특성에 따른 차등 지원과 서비스 연계를 정교하게 결합하여 보편적 지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완화하고 아동의 인적 자본 형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생존과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아동 양육 가구에 직접 지

급하는 보편적 현금지원 제도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가정은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양육비용과 돌봄 시간을 부담한다. 돌

1) 이 글은 하슬원, 이아영, 박소은, 이상영, 안수인, 박금령. (2025).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제4장 내용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봄에는 상당한 시간·노동 투입이 요구되고, 그 결과 부모의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할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아동수당법 제1조는 아동수당의 목적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초기 소득 하위 90%, 만 6세 미만 대상) 이후 2019년 보편화, 2022년 만 8세 미만으로의 대상 연령 확대를 거치며 정착하였다. 도입 당시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응과 양육비 경감이라는 이중 목표를 지녔지만, 실제 효과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는 급여 수준이 낮아 거시지표(출산율·빈곤율 등)에서 뚜렷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른 견해는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제공이 가계의 지출 우선순위 조절을 통해 아동에게 직접 이익이 귀속되는 미시적 경로, 곧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에서 효과가 드러난다고 본다. 소득이 잠재적 기회(capacity)를 나타내는 간접 지표라면, 소비는 실제 생활수준과 복지 개선을 반영하는 직접 지표라는 점에서(OECD, 2013; 이현주 외, 2016; 강지영 외, 2020 재인용) 정책의 실질적 작동 경로는 가계 내부의 자원 배분 변화-특히 소비지출 구조-에서 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특히 소액·정기 지급은 일시금에 비해 예측 가능성과 계획성을 높여 지출 구조에 지속적 영향을 줄 잠재력이 크다.

이 글은 아동수당이 가구의 소비지출 패턴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

존 논의가 출산율·노동공급·빈곤율 및 지출 총량 등 거시지표에 주로 주목해 온 데 비해 이 연구는 아동수당의 미시적 작동 경로인 가계 내부의 소비지출 구조 재편에 초점을 둔다. 특히 아동에게 직접 귀속되는 지출을 별도로 식별하여 지출 재배분과 그 이질 효과를 이중차분(DID)으로 추정한다. 단순한 소득 보안을 넘어 어떤 지출 항목이 변화되었는지, 그 결과 가계 내부의 자원 배분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소득계층과 자녀 수에 따른 차이도 함께 검토한다.

2 아동수당 효과의 이론·실증 근거

전통 경제학은 가계가 주어진 제약하에서 합리적으로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하지만, 실제 결정은 인지적 편향, 정보처리 한계, 재정적 스트레스의 영향 등 행동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Gennetian et al., 2021). 행동과학 문헌은 사람들이 소득을 완전히 대체 가능한 ‘한 묶음’으로 보지 않고, 출처·용도별로 분리해 인식·사용하는 정신적 회계(mental accounting)를 강조한다(Thaler, 1999). 아동을 명시 대상으로 하는 보편·정기 현금은 가계 내부에서 아동 전용 재원으로 전용(earmark)되어 아동에 대한 직접 지출을 늘리거나, 일부 가구에서는 미래 투자(저축, 교육 등)를 확대하는 경로로 작동할 수 있다. 반대로 재정적 압박이 큰 상황에서는 즉각적 소비 욕구(temptation goods) 충족이나 부채 상환을 우선하는 이질적 반응도 나타날 수 있다

(Duflo & Banerjee, 2011). 한편 재정적 스트레스와 정보처리 한계(인지적 과부하, cognitive load)는 소비 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나 (Mullainathan & Shafir, 2013), 소득의 안정성은 계획적·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동수당은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계획적 소비 결정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의 정기성·예측가능성은 계획적 지출을 촉진하고, 인지적 과부하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수당의 정기적 구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Mullainathan & Shafir, 2013).

아동수당은 가격(임금·물가)을 바꾸지 않고 소득만 증가시키므로 관찰되는 소비·저축의 변화는 전형적으로 비소득효과(Non-labor Income Effect)에 해당한다. 예산제약선의 평행 이동으로 정상재의 소비가 증가하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간 선택을 통해 저축이 늘 수 있다. 이때 어떤 항목이 얼마나 변하는지는 소득탄력성과 선호,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정신적 회계에 따른 용도 지정 여부에 달려 있다. 해외 실증연구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지지한다. 캐나다의 Canada Child Benefit(CCB)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교육비 증가와 비소득효과(Non-labor income effect)가 관찰되었으며 (Baker et al., 2023; Jones et al., 2019), 루마니아에서는 아동 품목 지출 증가, 성인 품목 감소가 확인되었다(Sahn & Gerstle, 2004). 니카라과(Nicaragua)의 현금지원 연구에서도 아동 건강·교

육 관련 지출 확대가 보고되었다(Macours et al., 2012). 국내에서도 총지출·빈곤지표의 큰 변화는 제한적이지만, 교육비 지출 비중 증가와 비목별 차등 효과가 제시되었다(강지영 외, 2020; 이래혁, 남재현, 2020). 다만 이 연구들의 분류체계로는 자녀에게 직접 귀속되는 지출인지의 식별이 충분히 정교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부 연구는 단기적·비생산적 소비로의 유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특히 경제적 제약이 큰 저소득층에서 그 경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하여 효율성 논쟁이 병존한다(Blundell et al., 2016). 이런 맥락에서 집단별 이질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한편 노동 공급 논쟁은 별도의 쟁점이다. 이론적으로 근로 외 소득 증가가 여가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게 만들어 특히 (2차 소득자로서) 기혼 여성의 노동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Dahl & Lochner, 2012; Borjas, 2005; González, 2013; Magda et al., 2018), 국내 추정치는 작거나 일관되지 않다는 결과가 보고된다(남재현, 2021; 고강혁, 2023). González(2013)는 자녀를 위한 현금지원이 모의 노동 공급을 낮추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의 출산일시금(one-time benefit)은 출생·입양당 2500유로의 고액·일회성 보조금으로, 한국의 낮은 수준의 월 정기수당과는 제도 설계가 현저히 다르다(González, 2013). 이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 아동수당이 노동 시장 참여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보편 수당처럼 소

득 증가에 따라 감액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근로유인 저하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Shaefer et al., 2018). 정책적 관점에서는 미국의 아동세액공제가 역진성·불안정성 등의 한계를 지녀 보편적 아동수당이 낙인효과 완화, 소득안정성 제고, 근로유인 유지 측면에서 상대적 장점도 제기되어 왔다(Shaefer et al., 2018). 명확한 점은 부모의 노동 공급은 아동에 대한 돌봄 시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이는 장기적 아동발달에 핵심적이다. 이에 아동수당이 부모의 시간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가사·돌봄의 외주화 지출을 소비지출 분석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아동수당의 도입 배경에는 저출산 논의가 자리해 왔으나, 출산율은 현금급여 단일수단으로 설명·개선되기 어려우며, 보육·교육·고용·주거 등 다차원 정책 믹스의 산물이다. 더욱이 일회성 출산지원금과 달리 아동수당은 아동 권리·복지를 1차 목표로 설계된 제도다. 따라서 출산유도 효과와 노동 공급 효과를 평가 기준으로 삼기보다 아동의 성장 환경과 복지 증진—특히 인적자본 투자로 이어지는 가계 지출 재배분—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론과 실증을 종합하면 아동수당의 핵심 작동 경로는 총지출의 확장이 아니라 지출의 재배분이다. 따라서 아동수당 효과를 평가할 때 아동 직접 지출(의료·문화·서적·문구 등)의 확대가 관찰되는지, 미래지향 지출(교육·저축 등)이 늘어나는지, 비필수재(주류·담배 등)가 줄어드는지, 가사·돌봄 외주화 지출 변화로 부모의 시간 배분 경로가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소득계층·자녀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3 분석 방법

가. 주요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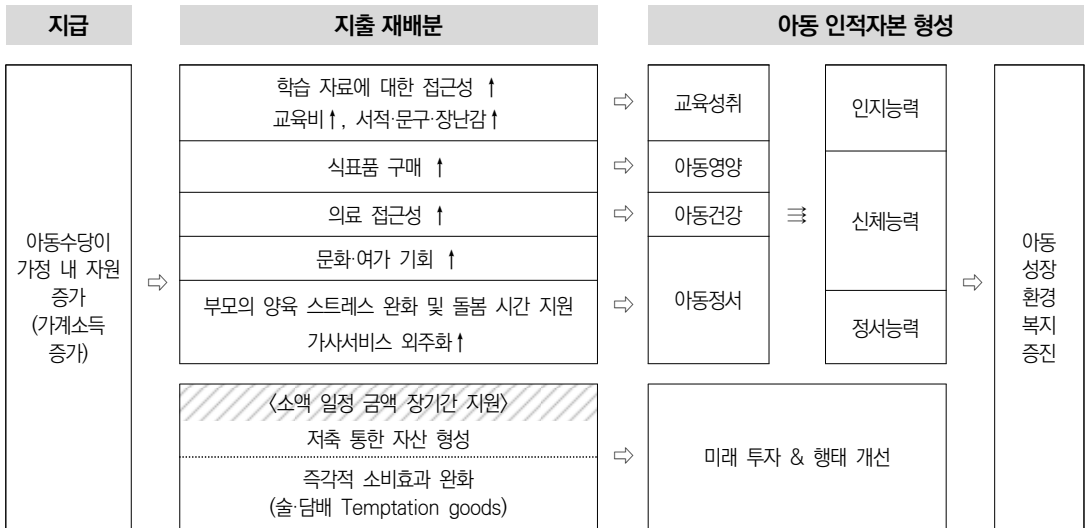
아동수당이 특정 지출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동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출 세부 항목의 변화를 검토한다.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는 실물 가치로 환산된 총소비지출액, 엔젤지수(낮은 생활 수준의 가구일수록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높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여가와 건강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는 지수로 총소비지출액 대비 식료품비 비중), 엔젤지수(총소비지출액 대비 교육비 비중), 그리고 세부 항목 지출액을 사용한다. 지출 항목은 완전히 배타적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분석 편의를 위해 [그림 1]과 같은 해석 틀을 적용한다. 교육비, 서적·문구비와 엔젤지수는 교육 관련 인적자본, 식료품비와 엔젤지수는 영양 관련 인적자본, 의료비는 건강 관련 인적자본, 문화·여가, 가사서비스는 정서적 측면, 그리고 저축 및 유혹재(주류·담배) 감소는 미래투자 및 행태 개선의 지표로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실제 살펴본 세부 지출 항목들에 대한 설명은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분석에 사용한 종속변수(지출 항목)

구분	지출 항목		자녀에 대한 직접 지출 항목	
총소비지출액	총소비지출액 ln(총소비지출액)		해당 없음	
식료품비	엔젤지수(식료품비/총소비지출액)		해당 없음	
	전체	식료품비 전체	자녀	곡물, 곡물가공품(두부), 육류, 신선수산물, 유제품 및 알, 과일, 채소, 해조
의류·신발	전체	의류·신발 전체	자녀	아동용 외의, 아동용 내의, 아동화
교육비	엔젤지수(교육비/총소비지출액)		해당 없음	
	전체	교육비 전체	자녀	초등교육비(유치원, 초등학교), 학원보습, 학생학원, 보충교육비 및 국내 교육연구비
문화·여가	전체	문화·여가비 전체	자녀	장난감, 서적(중고생 교재비는 제외), 문구, 문화서비스
보건의료	전체	보건의료 전체	자녀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등 의료 이용
가사서비스(외주화)	식품 관련 서비스, 가사도우미 급여		해당 없음	
주류·담배	주류 구입비, 담배 구입비		해당 없음	
저축	ln(적립예치식 저축)		해당 없음	

주: 신윤정, 김지연(2010), 고제이 외(2022)에서 분석한 자녀 양육비용 추계 시 자녀에 대한 직접 지출 항목 고려하여 자녀 직접 항목 구성.

[그림 1]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소비지출 재배분과 인적자본 형성의 관계



출처: “개인의 행태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하슬임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8.

나.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 자료는 총지출 및 특정 지출 항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인가용 자료 2018년~2021년, 적립예치식 저축 분석을 위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인가용 자료 2018~2021년을 활용한다.²⁾ 아동수당의 효과로 소비지

출 관련 부모의 행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도입 시기와 지원 대상 연령³⁾을 활용한 이중차분분석을 활용한다. 주 분석 대상은 각 조사 연도 기준 만 12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양육 중인 가구로 한다. 정책 시행 이전을 2018년, 시행 이후 시점을 2020~2021년으로 본다.⁴⁾ 처치집단은 만 0세~만 6세 이하 자녀를 1인 이상 양육 중인 가구, 비교집단은

[표 2] 분석 모형

분석 시기	분석 대상			
	전체 분석 (DID)	이질성 분석		
		자녀 연령 (확장형 DID)	소득수준 (DID)	자녀 수 (DID)
(이전) 2018년 (이후) 2020~2021년 *정책 이행 기간 2019년 제외	(처치) 만 0세~만 6세 (비교) 만 7세~만 11세	연령대 더미: 만 0~2세, 만 3~6세 (만 7~11세는 비교집단으로 포함)	하위집단 정의: - 저소득(1~2분위) - 중고소득(3~5분위)	하위집단 정의: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식 (1) 표준 DID $y_{i,t} = \beta_0 + \beta_1 (Treat_{i,t} \times After_t) + \beta_2 Treat_{i,t} + \beta_3 After_t + X_{i,t} + \lambda_t + \epsilon_{i,t}$

식 (2) 확장형 DID $y_{i,t} = \beta_0 + \beta_1 After_t + \beta_2 Treat_{i,t}^{처치집단1} + \beta_3 (Treat_{i,t}^{처치집단1} \times After_t) + \beta_4 Treat_{i,t}^{처치집단2} + \beta_5 (Treat_{i,t}^{처치집단2} \times After_t) + X_{i,t} + \lambda_t + \epsilon_{i,t}$

- 2) 아동수당은 2018년 11월 소득 하위 90%,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2019년 4월 보편 급여로 확대되었다. 같은 해 9월 만 7세 미만, 2022년 4월 만 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제도는 2018년 11월에 시행되었으나 실제 지급의 상당 부분이 2019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2018년 전체를 제도 도입 이전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반면 2019년은 소득 기준 폐지 및 대상 연령 확대가 시행된 기간으로, 이 시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3) 아동수당 자격은 연령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처치 정의의 정책 적합성이 높고, 연령은 조작 불가능한 행정적 변수라 임의배정 가정이 성립한다. 또한 제도 도입·확대는 가구가 선택할 수 없는 외생적 충격(exogenous shock)이므로 연령(처치)×시점(사후)의 이중차분(DID)으로 순효과를 식별한다. 소비지출의 계절성은 처치·비교 집단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경우 차분 과정에서 상쇄된다.
- 4)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7년을 전후로 조사 방식과 표본 설계에서 큰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시계열 연속성에 제약이 존재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2017년 이후부터는 일부 항목에 행정자료가 보완되어 공표되기 시작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소득 항목 중 일부가 행정자료로 대체되면서 이전 연도와와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중 저축 항목을 활용하며, 소득은 분위 구분을 통해 통제변수로 반영함으로써 2021년까지의 자료를 제한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계동향조사 또한 2017~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 대상과 방식, 표본 설계가 변경되었고, 연간 통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출 항목의 연도 간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출 부문은 전용 표본을 별도로 도입하면서 이전 자료와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2018년 이후 수집된 지출 금액 자료 역시 조사 체계 변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 시 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2018년을 아동수당 도입 이전의 유일한 비교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분석 시점에 있어 처치 이전 시점 추세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함을 밝힌다(통계청, 2024).

만 7세~만 11세 이하 자녀를 1인 이상 양육 중인 가구로 설정한다. 아동수당 수급 자녀와 미수급 자녀가 동시에 포함된 가구는 제외하여 분석한다. 이들을 포함할 경우 효과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분석 대상 및 시기는 <표 2>와 같다.

분석 식의 y 는 종속변수로서 소비지출, X 는 개인 및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reat$ 는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의미(아동수당 대상 가구=1, 아닌 경우=0의 더미 변수)한다. $After$ 는 아동수당 도입 시점, λ 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통제하기 위한 시간 더미이다. 통제변수는 가구소득, 가구 경제활동 관련(가구주 취업 여부, 가구주 종사상지위),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연속), 거주지역(도시, 읍면)을 모형에 반영한다. 가구소득구간 변수와 가구원 수 중 아동 수는 하위집단 분석 시 활용한다.

가구의 소득수준, 자녀 수, 자녀 연령과 같은 요소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하위집단 분석을 진행한다. 아동 나이에 따른 아동수당 효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확장형 이중차분분석을 수행한다. 즉 처치집단의 아동 나이에 따라 0~2세(영아), 3~6세(유아)로 추가 분석을 한다. 아동 수와 소득수준에 따른 효과 차이는 표본을 나누어 분석을 수행한다. 아동 수 1명 vs. 2명 이상, 그리고 소득수준 저소득층 vs. 중고소득층(5분위 구분에서 2분위 이하를 저소득층, 3분위 이상을 중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4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아동수당의 효과

<표 3>은 아동수당 도입 이후 가계 소비 구조 및 저축 변화를 살펴본 분석 결과이다. 전체 소비지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아동수당 도입 이후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에서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의류비 지출과 문화·여가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반면 식료품 지출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즉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는 추가적으로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기존 지출 조정을 통해 특정 소비 항목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식료품 등과 같은 필수 소비에서 문화·여가, 자녀 의류 지출 등 자녀를 위한 직접적인 선택적 소비로 지출 전환을 촉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아동수당이 일반 소득과 구분되어 특정 소비 항목, 특히 자녀를 위한 직접 의류비, 문화·여가비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부모들에게 예측 가능한 소득 증가를 제공하며, '자녀를 위한 소득'으로 심리적으로 분류하여 아동 관련 소비를 적극적으로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위집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이 아동 나이에 따라 소비 패턴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0~2세의 영아를 둔 가구에서는 식료품비는 감소하는 반면 자녀에게 직접 지출되는 의류비와 문화·여가비는 증가하였다. 3~6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도 의류비 및 문화·여가

[표 3] 아동수당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DID)

종속변수:	가계총소비지출		ln(가계총소비지출)		엔젤지수	영겔지수	ln(저축)
처치그룹×시행 후	4,931 (97,305)		0.00 (0.021)		-0.00 (0.004)	0.00 (0.005)	0.07 (0.053)
N	5,644		5,644		5,644	5,644	9,654
Adj R-sq	0.214		0.319		0.135	0.285	0.244
종속변수 (세부 항목):	식료품		의류		교육		
	전체	자녀	전체	자녀	전체	자녀	
처치그룹×시행 후	-25,441** (11,595)	-12,524* (7,530)	6,364 (11,478)	15,740*** (4,758)	20,894 (21,444)	7,409 (20,460)	
N	5,644	5,644	5,644	5,036	5,644	5,644	
Adj R-sq	0.198	0.149	0.092	0.098	0.334	0.324	
종속변수 (세부 항목):	문화여가(서적·문구 포함)		보건의료		가사서비스	술담배	
	전체	자녀	전체	자녀			
처치그룹×시행 후	47,463*** (12,878)	13,329** (6,496)	-10,721 (16,825)	-14,651 (14,885)	-11,327 (10,948)	-2,279 (3,247)	
N	5,644	5,644	5,644	5,644	5,644	5,644	
Adj R-sq	0.121	0.056	0.034	0.016	0.043	0.044	

주: *** p<0.01; ** p<0.05; * p<0.1; 연도 및 통제변수는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소득, 경제활동 상태, 배우자 여부, 가구원 수, 도시, 연도.

출처: “개인의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하솔원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2.

비 증가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이들 연령대에서는 서적·문구비도 유의미하게 증가함에 따라 학령 전 아동의 학습과 정서적 발달을 고려한 소비 패턴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학습 및 문화적 경험에 대한 가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아동수당이 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가사서비스 지출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직접 돌봄 투입 확대(시간 재배분)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한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사노동 배분이 가사서비스 지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⁵⁾

5) DID 모형은 공통 시기 충격을 차분하므로 팬데믹의 평균 효과가 결과에 직접 중첩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령별로 상이한 충격 강도는 일부 잔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여가 중 서적·문구 지출의 유의한 증가는 대면교육·사교육 축소 이후 가정 내 학습환경으로의 전환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정기적 유동성이 전환에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사서비스 지출의 감소는 팬데믹 시기 부모의 근로시간·근무형태 변화(재택·단축)와 가사·돌봄의 가구 내 재배치로 인한 외주화 수요 축소의 효과가 작용했을 수 있다. 즉 팬데믹으로 형성된 행동 패턴, 서비스 이용 가능성의 차이 속에서 아동수당이 유도한 지출 재배분의 효과를 포착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참고로, 고재이 외(2024)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동시 충격으로 인한 환경 변화를 배제하고 도입 초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18~2019년 자료로 보조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2019년 정책 이행 과정에서 연령 경계가 변동된 만 6세는 교란을 줄이기 위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소비·저축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아동 의료비 증가, 교육비 감소, 엔겔지수 하락 등 소비구조 재배분 신호가 일부 관찰되었다. 이는 정책 초기의 과도기적 적응과 공공 보육·유아교육 확대에 따른 사교육 대체 가능성과 부합하며, 본문 영아기 분석에서 확인된 교육비 감소와도 일관된다. 다만 가계동향·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7년 이전

소득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엔젤지수와 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 가구에서 아동수당이 생계 보조와 교육 투자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Gennetian et al.(2021)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일수록 현금지원이 아동의 기본적인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소비 항목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일맥

[표 4] 아동 나이에 따른 아동수당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DID)

종속변수:	가계총소비지출	ln(가계총소비지출)	엔젤지수	엔젤지수	ln(저축)
0~2세×시행 후	-38,994 (117,493)	-0.03 (0.025)	-0.00 (0.004)	-0.00 (0.006)	0.07 (0.069)
3~6세×시행 후	29,931.5 (112,143.9)	0.02 (0.024)	-0.00 (0.004)	0.00 (0.006)	0.05 (0.061)
N	5,644	5,644	5,644	5,644	9,654
Adj R-sq	0.215	0.320	0.143	0.335	0.245

종속변수 (세부 항목):	식료품		의류		교육	
	전체	자녀	전체	자녀	전체	자녀
0~2세×시행 후	-37,069*** (13,971)	-18,530** (9,006)	-11,800 (13,851)	16,397*** (5,658)	-12,107 (25,238)	-24,951 (23,994)
3~6세×시행 후	-10,923 (13,336)	-798 (8,597)	19,777 (13,221)	14,280*** (5,456)	17,744 (24,089)	3,199 (22,902)
N	5,644	5,644	5,644	5,036	5,644	5,644
Adj R-sq	0.201	0.165	0.094	0.099	0.367	0.363

종속변수 (세부 항목):	문화여가(서적·문구 포함)			보건의료		가사서비스	술담배
	전체	자녀	서적문구	전체	자녀		
0~2세×시행 후	37,381** (15,515)	6,493 (7,841)	-601 (5,099)	-13,993 (20,267)	-10,789 (17,973)	9,778 (13,187)	-3,187 (3,921)
3~6세×시행 후	50,289*** (14,809)	18,213** (7,484)	8,125* (4,867)	-189 (19,345)	-15,947 (17,155)	-24,678** (12,587)	-1,699 (3,743)
N	5,644	5,644	5,644	5,644	5,644	5,644	5,644
Adj R-sq	0.125	0.057	0.048	0.039	0.016	0.048	0.044

주: *** p<0.01; ** p<0.05; * p<0.1; 연도 및 통제변수는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소득, 경제활동 상태, 배우자 여부, 가구원 수, 도시, 연도.

출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하솔임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7.

조사회제 개편으로 시계열이 단절되어 2018년만 사전(Pre)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이중차분으로 교란을 통제하더라도 공공지원 확대 효과 등 연령별 구조 차이를 완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연도 고정효과·가구 특성 통제를 포함하고, 인접 연령대 비교 및 연령 범위 조정 등 경계효과 점검을 병행하였다(연령 범위 조정에 따른 강건성 결과는 하솔임 외, 2025 참조).

상통한다. 반면 중고소득 가구에서는 식료품비는 감소하며, 의류비 및 문화·여가비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적립예치식 저축의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에서는 아동수당이 필수 소비보다는 자녀의 생

활수준 향상 및 정서·문화적 경험 확대, 그리고 미래를 위한 직접적인 투자를 위한 소비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수당 정책이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저소득 가구는 아동수당을 기

[표 5]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수당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DID)

종속변수:	가계총소비지출		ln(가계총소비지출)		엔젤지수	엔젤지수	ln(저축)
저소득×시행 후	31,486 (180,526)		0.04 (0.063)		-0.00 (0.013)	0.03** (0.014)	0.14 (0.163)
N	666		666		666	666	1,605
Adj R-sq	0.138		0.178		0.197	0.251	0.145
중고소득×시행 후	75,393 (114,706)		0.02 (0.024)		-0.01 (0.004)	0.00 (0.005)	0.13** (0.057)
N	4,978		4,978		4,978	4,978	8,049
Adj R-sq	0.061		0.089		0.067	0.282	0.106
종속변수	식료품		의류		교육		
(세부 항목):	전체	자녀	전체	자녀	전체	자녀	
저소득×시행 후	-7,061 (29,966)	9,411 (19,083)	-480 (25,229)	1,017 (10,405)	107,887*** (41,425)		93,771** (37,398)
N	666	666	666	585	666		666
Adj R-sq	0.186	0.183	0.056	0.161	0.223		0.236
중고소득×시행 후	-21,741* (12,760)	-11,242 (8,275)	13,695 (12,908)	18,836*** (5,255)	23,272 (24,475)		7,930 (23,368)
N	4,978	4,978	4,978	4,451	4,978		4,978
Adj R-sq	0.143	0.107	0.028	0.071	0.279		0.271
종속변수	문화여가(서적·문구 포함)			보건의료		가사서비스	술담배
(세부 항목):	전체	자녀	서적문구	전체	자녀		
저소득×시행 후	37,445 (27,189)	12,409 (13,252)	7,351 (6,548)	-10,041 (33,626)	-13,646 (29,023)	-1,469 (6,489)	-6,381 (8,790)
N	666	666	666	666	666	666	666
Adj R-sq	0.062	0.061	0.030	0.049	0.041	0.023	0.112
중고소득×시행 후	57,817*** (14,583)	15,674** (7,218)	6,071 (4,747)	-9,505 (18,633)	-14,642 (16,466)	-9,525 (12,546)	-2,115 (3,496)
N	4,978	4,978	4,978	4,978	4,978	4,978	4,978
Adj R-sq	0.046	0.025	0.026	0.016	0.009	0.016	0.036

주: *** p<0.01; ** p<0.05; * p<0.1; 연도 및 통제변수는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배우자 여부, 가구원 수, 도시, 연도.

출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하솔임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9.

본 생계 비용 보완으로 인식하여 필수재 소비(식료품)와 투자재(교육)로 지출하는 반면 중고소득 가구는 이를 여유 자금으로 간주하여 문화·여가 활동과 의료, 그리고 저축 등 선택적 소비와 미래 투자에 배분하는 경향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자녀 수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가구에서는 엔젤지수(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와 식료품비가 낮아진 반면 자녀

[표 6]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DID)

종속변수:	가계총소비지출		ln(가계총소비지출)	엔젤지수	엔젤지수	ln(저축)	
1명×시행 후	89,249 (133,449)		0.02 (0.028)	-0.01** (0.005)	0.01 (0.007)	0.13* (0.076)	
N	3,060		3,060	3,060	3,060	4,693	
Adj R-sq	0.210		0.324	0.116	0.344	0.291	
2명 이상×시행 후	-135,184 (158,316)		-0.03 (0.035)	-0.01 (0.006)	0.00 (0.008)	0.04 (0.075)	
N	2,584		2,584	2,584	2,584	4,961	
Adj R-sq	0.200		0.277	0.144	0.185	0.200	
종속변수 (세부 항목):	식료품		의료		교육		
	전체	자녀	전체	자녀	전체	자녀	
1명×시행 후	-42,465*** (14,940)	-27,816*** (9,619)	16,954 (14,515)	12,985** (5,564)	48,881* (28,467)	33,098 (26,937)	
N	3,060	3,060	3,060	2,699	3,060	3,060	
Adj R-sq	0.170	0.126	0.104	0.105	0.354	0.349	
2명 이상×시행 후	-28,235 (21,009)	-4,423 (13,699)	-9,522 (20,298)	19,560** (8,695)	-1,704 (37,383)	-208 (35,535)	
N	2,584	2,584	2,584	2,337	2,584	2,584	
Adj R-sq	0.122	0.092	0.081	0.081	0.248	0.250	
종속변수 (세부 항목):	문화여가(서적·문구 포함)			보건의료		가사서비스	술담배
	전체	자녀	서적문구	전체	자녀		
1명×시행 후	43,396*** (16,670)	18,875** (8,630)	9,388 (5,801)	-12,356 (21,178)	-9,773 (18,797)	-8,849 (11,518)	2,979 (4,211)
N	3,060	3,060	3,060	3,060	3,060	3,060	3,060
Adj R-sq	0.121	0.050	0.045	0.043	0.020	0.041	0.050
2명 이상×시행 후	72,732*** (22,142)	14,491 (10,838)	1,625 (6,747)	-4,951 (30,021)	-16,785 (26,455)	-16,084 (22,094)	-13,397** (5,552)
N	2,584	2,584	2,584	2,584	2,584	2,584	2,584
Adj R-sq	0.129	0.066	0.059	0.017	0.008	0.048	0.052

주: *** p<0.01; ** p<0.05; * p<0.1; 연도 및 통제변수는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소득, 경제활동 상태, 배우자 여부, 도시, 연도.

출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하솔원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1.

를 위한 의류비 직접 지출, 교육비, 문화·여가, 적립 예치식 저축 관련 항목에서 지출이 증가했다. 이는 부모들이 아동수당을 활용하여 자녀 1명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을 반영하는데, 특히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고려한 소비 증가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한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엔젤지수)은 낮아졌으나, 교육비 자체는 여전히 증가했다. 이는 가계가 다른 소비 항목에 더 많이 지출함을 의미한다. 즉 자녀 1명을 둔 가구는 아동수당을 다양한 소비 분야에 걸쳐 분산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서도 의류비와 문화·여가비 증가가 확인되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서는 술·담배 소비가 감소하는 특징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부모들이 비필수재 소비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가계 지출을 자녀 중심으로 재조정했음을 의미한다. 인지적 과부하(cognitive load) 이론(Shafir & Mullainathan, 2013)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최적의 지출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필수 소비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비필수 소비 항목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 패턴을 조정할 유인이 크다. 그 결과 아동수당이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소비됨을 알 수 있다. 자녀가 1명인 가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집중 투자 경향이, 다자녀 가구에서는 전체 가계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5 나가며

아동수당의 효과는 소비 항목과 가구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의 확대보다는 지출구조의 재배분 방식으로 드러났고, 의류·문화·서적·문구 등 아동에 대한 직접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기·예측 가능한 현금급여가 아동 전용 재원으로 인식·사용되는 행태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가구 특성별 이질성도 뚜렷했다. 저소득 가구에서는 교육비와 식료품비가 동시에 증가하여 아동수당이 기초생활 안정과 아동 투자라는 이중 기능을 병행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반면 중고소득 가구에서는 문화·여가 지출이 늘고, 나아가 적립예치식 저축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현재의 경험재 소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미래를 대비한 자산 형성으로 일부 재원이 배분되었음을 의미한다. 자녀 1명 가구에서도 저축 증가가 확인되었는데, 1자녀 가구의 집중 투자 성향이 저축 행태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다자녀 가구에서는 주류·담배 지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비필수재를 축소해 자녀 중심 지출로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비 패턴을 아동 중심·미래지향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기여했다. 부모가 아동수당을 일반 소득과 구분해 ‘자녀를 위한 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비하는 경향은 정기적 현금급여가 행동적 유인을 통해 지출의 용도, 우선순위를 바꾸는 멘탈 어카운팅(mental accounting,

Thaler, 1999)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함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소득이 제공될 때 가구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아동 복지와 미래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중고소득 및 1자녀 가구에서 관찰된 적립 예치식 저축의 유의한 증가는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도의 구조가 가구의 장기 재정 계획을 가능하게 하고,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 배분에서 미래 비중을 확대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수당이 단순한 소득 보안을 넘어 가계 내부의 자원 배분을 아동의 성장 환경과 인적자본 형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제도 설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현금지원 구조는 영아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학령기 이후에는 현금급여가 취약해 생애주기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향이 있다. 아동 생애 초기 투자 효과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초기 지원의 지속성과 누적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학령기·청소년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연령의 점진적 확대는 보편성 강화와 아동의 생존권·발달권 보장 측면에 의의가 있으나, 생활 안정과 투자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연령 확대 등 보편성 강화를 유지하되 보편적 지원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가구 특성에 맞춘 미세 조정을 해야 한다. 본 연

구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효과는 가구 특성에 따라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 자녀 1명 가구는 개별 자녀에 대한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자녀 가구는 예산 제약하에서 가족 단위의 지출 조정(예: 비필수재 축소)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고제이 외(2024)의 자녀 양육비용 분석에서도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공통 비용은 줄지만, 인적자본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자녀에 대한 직접 지출의 감소폭은 더 커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질성을 감안하여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자녀 투자 여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가구는 수당이 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생계성 지출(엔겔 지수) 부담이 병행되어 정서·사회적 발달을 위한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로 추가급여 혹은 서비스 연계를 고려한 교육과 정서 영역을 동시에 지원하는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최근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전반적인 아동 삶의 만족도와 건강 상태는 개선되고 박탈·결핍 수준은 완화되는 추세이나, 소득수준 및 가구 유형에 따른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특히 미래 대비 영역의 박탈 수준과 정기적 여가활동 관련 결핍 수준 등에서 취약가구의 열위가 남아 있다(이상정 외, 2023). 즉 보편 지원의 기반이 강화되는 가운데에서도 보편 속 격차를 완화할 정교한 타기팅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하위집단 분석 결과는 이러한 격차 완화형 보완 정책

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아울러 재정적 압박하에서 부모들(특히 저소득 가구 혹은 다자녀 가구)은 손실회피 성향으로 미래 투자 관점의 소비보다 즉각적인 생활비 해결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행동기반 설계 병행을 통한 수당의 미래지향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대한 매칭 저축이나 자산형성 연계 및 인센티브 적용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다만 매칭 저축 등 자산형성 정책은 부모 추가 납부 여력과 금융 접근성 차이에 따라 실질 수혜 격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취약 가구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설계가 필수적이다.

끝으로, 무조건적 현금지원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보다 세심한 양육과 아동 중심의 지출 재배분, 그리고 미래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단순 현금지급에 그치지 않고, 생애주기 연계와 가구 특성별 차등 지원, 행동 기반 유인 설계 결합 등을 통해 아동 인적자본 형성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일한 재정으로도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지영, 전용, 안서연. (2020). 아동수당 도입은 가구의 소비지출을 변화시켰는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7, pp. 5-31.
- 고강혁. (2023).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아동수당 효과 분석**. 제31회 인구포럼: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포럼.
- 고제이, 하슬임, 나원희, 박소은, 이진이, 최환용. (2022).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고제이, 이아영, 하슬임, 양미선, 황안나. (2024). **아동수당제도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보건복지부.
- 남재현. (2021). 아동수당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70), 133-166.
- 신윤정, 김지연. (2010).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래혁, 남재현. (2020).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9(3), 27-56.
- 이상정, 이주연, 전진아, 김수진, 임성은, 신영규, 류정희, 하태정, 권영지, 김시아, 김지현, 유민상. (2023).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강신욱, 김현경, 이병희, 주상영, 전지현. (2016). **저소득층 가구소비 변화와 사회정책적 함의** (연구 보고서 2016-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용자 가이드북**.
- 통계청. (2024)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북**.
- 통계청. (2024). **가계동향조사 연간데이터 2018-2021** [데이터 세트]. 통계청 MDIS.
- 통계청.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연간데이터 2018-2021** [데이터 세트]. 통계청 MDIS.
- 하슬임, 이아영, 박소은, 이상영, 안수인, 박금령. (2025).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aker, M., Messacar, D., & Stabile, M. (2023).

- Effects of child tax benefits on poverty and labor supply: Evidence from the Canada.*
- Blundell, R., Pistaferri, L., & Saporta-Eksten, I. (2016). Consumption inequality and family labor supply. *American Economic Review*, 106(2), 387–435.
- Borjas, G. J. (2005). The labor-market impact of high-skill immig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5(2), 56–60.
- Dahl, G. B., & Lochner, L. (2012). The impact of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Evidence from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merican Economic Review*, 102(5), 1927–1956.
- Duflo, E., & Banerjee, A. (2011). *Poor economics*. PublicAffairs.
- Gennetian, L. A., Shafir, E., Aber, J. L., & De Hoop, J. (2021). Behavioral insights into cash transfers to families with children. *Behavioral Science & Policy*, 7(1), 71–92.
- González, L. (2013). The effect of a universal child benefit on conceptions, abortions, and early maternal labor suppl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5(3), 160–188.
- Jones, L. E., Milligan, K., & Stabile, M. (2019). Child cash benefits and family expenditures: Evidence from the National Child Benefi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Revue canadienne d'économie*, 52(4), 1433–1463.
- Macours, K., Schady, N., & Vakis, R. (2012). Cash transfers, behavioral changes,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evidence from a randomized experiment.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4(2), 247–273.
- Magda, I., Kielczewska, A., & Brandt, N. (2018). *The effects of large universal child benefits on female labour supply* (IZA Discussion Paper No. 11652). IZA.
- Mullainathan, S., & Shafir, E. (2013). Decision making and policy in contexts of poverty. *Behavioral foundations of public policy*, 16, 281–300.
- OECD. (2013).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OECD Publishing.
- Sahn, D. E., & Gerstle, A. (2004). Child allowances and allocative decisions in Romanian households. *Applied Economics*, 36(14), 1513–1521.
- Shaefer, H. L., Collyer, S., Duncan, G., Edin, K., Garfinkel, I., Harris, D., Smeeding, T. M., Waldfogel, J., Wimer, C., & Yoshikawa, H. (2018). A universal child allowance: A plan to reduce poverty and income instability among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RSF: The Russell Sage Foundation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s*, 4(2), 22–42.
- Thaler, R. H. (1999). Mental accounting matter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2(3), 183–206.

The Effects of the Child Allowance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Lee, Ayo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present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Child Allowance on the structure of household expenditures. The changes were more pronounced in the composition of expenses than in the total amount spent, with a common trend across households being increased direct spending on children's clothing, recreation, and books and stationery items. The effect, however, varied across socioeconomic classes. Among low-income households, spending on children's education and food increased, suggesting that for this group the Child Allowance serves as both a supplement to living expenses and an investment in children. Middle- and high-income households, as well as one-child families, showed an increase in savings through installment plans. All this aligns with the household-level tendency to view the Child Allowance as funds earmarked exclusively for children's needs, thus bringing changes in both spending priorities and structure. The allowance scheme illustrates how a stable, predictable source of income flow can contribute, more effectively than mere cash transfers, to the development and welfare of children. To improve the program,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expanding the coverage of the Child Allowance to include a broader age range, while also seeking to reduce disparities by combining tiered support with tailored services in a detailed manner.